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2면	강원농어촌체험휴양마을協 정기총회	1
강원도민일보	22면	도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정기총회	1
강원도민일보	06면	"상생·소통·성장 강화 ... 지역 사회 발전 이바지"	2
江原日報	07면	"경륜·리더십으로 지역사회 공헌 앞장"	3
江原日報	03면	"평균 66세 산불감시원에 고강도 체력검정 위험"	4
SBS	온라인	등짐펌프 메고 '헉헉'...위험천만 산불감시원 체력 시험 여...	5
연합뉴스		등짐펌프 메고 '헉헉'...위험천만 산불감시원 체력 시험 여...	6
江原日報	03면	도의회 윤리특위, 윤길로 도의원 '경고'	7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의회 윤리특위 '공무원 갑질' 의원에 경고 처분	7
G1방송	온라인	도의회 윤리특위, 부적절 언행 도의원 징계 의결	8
KBS 강릉	온라인	국회의원 선거 동원되는 지방의원..."자치 훼손 우려"	9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원제용(원주) 도의원	10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이현종(원주) 철원군수·김정수(철원) 도의원	10
江原日報	21면	[동정]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춘천)	10
강원도민일보	09면	[동정]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10
강원도민일보	15면	평창군의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확정	11
江原日報	15면	평창군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으로 인상	11
강원도민일보	01면	도내 병원 "한주 못 버틴다"... 의대생 동맹휴학까지	12
강원도민일보	04면	전공의 떠난 병원, 응급환자 3시간 넘게 도전역 뱅뱅이	13
江原日報	02면	도내 외국인 석·박사 영주권 취득 쉬워진다	13
江原日報	14면	폐광지 응급환자 이송지원 효과 톡톡	14
강원도민일보	16면	주택 신축·개량 저금리 지원 인구유입 모색	14
강원도민일보	10면	원주 도내 첫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 가동	15
강원도민일보	11면	"옥계 폐놀 유출지역 전면 재조사" 주민 촉구	15
강원도민일보	13면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내달 공식 출범	16
江原日報	16면	상습침수 철원 동막리 집단이주 추진	16
강원도민일보	14면	홍천주민 "태양광시설 편법설치 난무 대책을"	17

江原日報	13면	도로 통제 버스 끊겨 ... 재난안전본부 가동	17
강원도민일보	01면	영동 폭설 고성 향로봉 56.6cm·속초 49.3cm	18
강원도민일보	05면	무거운 습설에 도로·하늘길 막혀...제설장비·인력 총출동	18
江原日報	05면	'56cm 눈폭탄' 도로 마비·교통사고 수십건	19
江原日報	01면	오늘 산간에 눈 40cm 더 쏟아져... 영동 내일도 뽕뽕	19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선거구 획정 더 미뤄선 안 된다	2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비수도권 열악한 공공의료 방치 안돼	21
江原日報	19면	[사설] 道 소멸위험 전국 세 번째 수준, 위기 극복하자면	22
江原日報	19면	[사설] 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숨통 터 줘야	23

江原日報

2024년 02월 22일 (목)

종합 02면



강원농어촌체험휴양마을協 정기총회 강원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대표:이강목)는 21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을 비롯, 임안순 전국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장, 16개 시·군 184개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2024년도 사업추진계획 보고 및 예산(안) 등을 승인·의결했다. 박승선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2일 (목)

인물 22면



도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정기총회 강원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회장 이강목) 정기총회가 21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의장 등 내빈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희태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2일 (목)

경제 06면



21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강원여성경영인협회 회장 이취임식이 열려 김선미 회장이 취임했다. 유희태

“상생·소통·성장 강화...지역 사회 발전 이바지”

강원여성경영인협회장 이·취임식

강원여성경영인협회장 이·취임식이 21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에서 열려 제4대 송문숙 회장이 이임하고 김선미 제5대 회장이 취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정재웅·박기영·양숙희 도의원, 김홍섭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장, 이왕재 강원중소벤처기업청장,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등 내빈과 회원사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선미 신임회장은 “상생·소통·성장하는 협회가 될 것이라 믿고, 함께 힘을 모아 지역 사회의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열망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우진

江原日報

2024년 02월 22일 (목)

경제 07면



◇강원여성경영인협회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이 21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려 김선미 신임 회장, 송문숙 이임 회장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내빈들이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박승선기자

“경륜·리더십으로 지역사회 공헌 앞장”

김선미 도여성경영인협회장 취임

김선미 강원여성경영인협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강원여성경영인협회는 21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송문숙 회장이 이임하고 김선미 회장이 취임했다.

김선미 회장은 취임사에서 “꽃들이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듯 강원 지역의 여성 경영인들이 함께 피어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협회로, 지역사회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열망한다”고 말했다.

송문숙 이임 회장은 “그동안 협회

활동에서 김선미 회장이 보여준 경륜과 리더십, 경영능력을 믿는다”며 “앞으로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협회를 기대하며 임기를 마무리한다”고 응원했다.

제5대 회장단 부회장은 춘천, 강릉, 원주, 철원, 양구, 정·태·영·삼, 횡성지회장이 각각 맡는다. 송문숙 이임 회장은 협회 고문을 맡아 새로 출범하는 회장단을 지원한다. 송문숙 이임 회장에게는 협회장 감사패와 공로패가 전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권혁열 도의장,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이왕재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을 비롯한 내빈 및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현아기자

江原日報

2024년 02월 22일 (목)

종합 03면

“평균 66세 산불감시원에 고강도 체력검정 위험”

강정호 도의원 “일부 지자체 산림청보다 엄격 선발” 제기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가 도내 일부 지자체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정호(국민의힘·속초·사진) 도의원은 21일 “지난 몇 년간 산불감시원 체력 검정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산림청이 채용 규정을 완화했지만, 도내 일부 지자체가 여전히 고강도 체력 검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2021년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을 개정해 체력시험 이동거리를 2km에서 1km로 줄였다. 또 완주



시간별 차등 평가를 없애고 30분 이내 도착으로 통일했다. 인명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뛰는 응시자에

대한 감점 항목도 신설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기준은 산림청보다 엄격했다. 평창은 1.2km를 뛰어 시간을 측정했고, 화천은 15kg 등짐 펌프 착용 후 2km를 이동하도록 했다. 횡성은 800m를 1등부터 순위별로 점수를 분배했고, 속초, 철원, 고성도 400m를 시간별로 차등 평가했다.

강 의원은 “도내 산불감시원 평균 연령은 66세이고 지원 연령대가 주로 고령층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인명사고 위험이 있다”며 “산불 예방과 홍보를 주로 하는 산불감시원 업무 특성을 고려, 서류와 면접 심사 또는 직무수행평가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25회 도의회 임시회는 23일까지 이어진다. 강원자치도 지원특위는 22일 오후 2시 운영위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현황을 살핀다. 같은 날 오후 4시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위는 기획위 회의실에서 접경지역 개발촉진 지원 현황을 보고받는다. 이현정기자



2024년 02월 21일 (수)

사회

등짐펌프 메고 '헉헉'...위험천만 산불감시원 체력 시험 여전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산불 진화가 아닌 예방.홍보가 주 업무인 산불감시원이 체력 시험 중 숨지는 사례가 잇따라 산림청이 채용 규정을 완화했음에도 강원도 일부 지자체에서 여전히 고강도 체력 검정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국민의힘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1)이 강원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8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 체력 검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은 2021년 2월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을 개정해 체력 시험 시 등짐펌프(15kg) 착용 뒤 이동 거리를 2 에서 1 로 낮췄습니다.

완주 시간별 차등 평가(25분 이내 30점.30분 이내 20점.30분 이상 10점)도 없애고, '30분 이내 도착'으로 통일했습니다.

체력 검정 중 뛰는 응시자는 감점(-10점)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지원자의 인명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체력 시험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평창군은 1.2 를 뛰어서 시간을 측정하고, 화천은 이동 거리를 여전히 2 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횡성군은 800 거리를 1등부터 순위별로 점수를 차등 분배하고 있으며, 속초.철원.고성의 경우 이동 거리는 400 로 완화했으나 시간별 차등 평가를 하는 등 여전히 까다로운 기준이 존재했습니다.

운영 규정상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표는 각 시군 특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으나 도내 산불감시원 평균연령이 66세인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요구입니다.

강정호 의원은 "산불감시원 지원 연령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몰린 점과 예방 단속과 홍보를 주로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서류와 면접 심사 또는 직무수행 평가 등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2024년 02월 21일 (수)

사회

등짐펌프 메고 '헉헉'...위험천만 산불감시원 체력 시험 여전

강원 일부 지자체, 산림정보다 엄격 선발..."대체 방안 필요"



산불감시원 선발 체력테스트
[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산불 진화가 아닌 예방·홍보가 주 업무인 산불감시원이 체력 시험 중 숨지는 사례가 잇따라 산림청이 채용 규정을 완화했음에도 강원도 일부 지자체에서 여전히 고강도 체력 검정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민의힘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1)이 강원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8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 체력 검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2021년 2월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을 개정해 체력 시험 시 등짐펌프(15kg) 착용 뒤 이동 거리를 2에서 1로 낮췄다.

완주 시간별 차등 평가(25분 이내 30점, 30분 이내 20점, 30분 이상 10점)도 없애고, '30분 이내 도착'으로 통일했다.

체력 검정 중 뛰는 응시자는 감점(-10점)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지원자의 인명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체력 시험 방법을 바꿨다.

그러나 평창군은 1.2를 뛰어서 시간을 측정하고, 화천은 이동 거리를 여전히 2로 적용하고 있었다.

횡성군은 800거리를 1등부터 순위별로 점수를 차등 분배하고 있으며, 속초·철원·고성의 경우 이동 거리는 400로 완화했으나 시간별 차등 평가를 하는 등 여전히 까다로운 기준이 존재했다.

운영 규정상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표는 각 시군 특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으나 도내 산불감시원 평균연령이 66세인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요구다.

강정호 의원은 "산불감시원 지원 연령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몰린 점과 예방 단속과 홍보를 주로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서류와 면접 심사 또는 직무수행 평가 등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엔사이드, 신아일보등 20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24년 02월 22일 (목)

종합 03면

도의회 윤리특위, 윤길로 도의원 '경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

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1일 회의를 열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윤길로 도의원(본보 2023년 11월28일자 온라인 보도, 12월7일자 3면 보도)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4가지로 구

정돼 있다.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청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권혁열 도의장은 지난해 12월 윤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는 23일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지난해 12월 윤리위원회를 열고 윤 의원을 제명했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2일 (목)

종합 02면

도의회 윤리특위 '공무원 갑질' 의원에 경고 처분

임시회 비공개 회의서 의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무원 갑질'을 한 A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기)는 21일 제325회 임시회 1차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징계 의결 이후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게 돼있다.

A의원은 지난해 11월 공무원에 대한 갑질 언행 등으로 논란이 됐고, 국민의힘은 A의원을 제명했다. 이설화

G1방송

2024년 02월 21일 (수)

강원

도의회 윤리특위, 부적절 언행 도의원 징계 의결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강원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물의를 빚은 A 도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A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청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알려져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에서도 제명됐습니다.

A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3일 예정된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2024년 02월 21일 (수)



강원

국회의원 선거 동원되는 지방의원...“자치 훼손 우려”



[앵커]

4.10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지방의원들이 같은 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 활동에 참여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입니다.

같은 당 소속 강원도의회원이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의회 회기중이라 도의회와 후보 사무실을 오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원 A/음성변조 : "이런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에, 또 아니면 의정활동에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지방의원을 선거에 동원하는 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달 2일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거리 인사를 할 당시, 같은 당의 도 내 지방의원 4명이 함께 참여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의원 B/음성변조 : "'선거를 잘 치러야 다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투입되는 건 공천권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사실상 국회의원에게 갖고 있다보니 지방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부 지방의원 사이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원 입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시군의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나서야 하는 지방의원의 본분을 지키자는 얘깁니다.

[강원도의원 C/음성변조 : "예비후보 때는 지방의원들은 좀 선거운동을 안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각 정당이 선거 운동에 현역 지방의원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정 노력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박성은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2일 (목)

인물동정 10면
국동계체육대회개회
식에 참석한다.



원제용(원
주) 도의
원은 22일
오후 5시
평창 모나

윙평 그린피아콘도에
서 열리는 제105회 전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2일 (목)

인물동정 16면
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한다.



이현중(왼쪽) 철원군
수·김정수(철원)도의
원은 22일 오후 5시 평
창 모나윙평 그린피아
콘도 1층 그랜드볼룸
에서 열리는 제105

江原日報

2024년 02월 22일 (목)

인물동정 21면

◇정재웅강원특별자치도의
회사회문화위원
장(춘천)은 22일
오후 1시30분 천
주교 춘천교구
가톨릭회관 대



강당에서 열리는 2024년 강원
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사
업 연찬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2일 (목)

인물동정 09면



정재웅 도
의회 사회
문화위원
장은 22일
오후 1시

30분천주교춘천교구
가톨릭회관에서 열리
는 강원특별자치도 청
소년상담복지사업 연
찬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2일 (목)

지역 15면

평창군의회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확정

심의회, 인상안 전원동의 의결
물가상승률·여론조사 결과 반영
내달 조례안 개정 후 최종확정

평창군의회 의정활동비가 올해부터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평창군의회정비심의위원회는

2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군의회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위원 전원 동의로 의결했다. 군의회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개최한 1차 회의에서 군의회 의정활동비가 지난 20년간 동결돼 온 점과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한가인 150만원으로 인상 방침을 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00명 중 280명(56%)이 인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했고 220명(44%)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회정비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인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150만원으로 인상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군은 이날 군의회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인상 내용을 군의회에 통보하고, 군의회는 3월 중 관련 조례안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신현태

江原日報

2024년 02월 22일 (목)

지역 15면

평창군의회 의정활동비 150만원으로 인상

군의회정비심의위 최종 의결

【평창】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1일 2차 회의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평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150만원으로 인상키로 최종 의결했다.

위원회는 올 1월 열린 1차 회의에서 지급기준을 150만원으로 잠정결정하고 주민의견 수렴 방식을 여론조사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주민 500

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 500명 중 56%인 280명이 인상에 대해 적정하다고 응답했고, 심의회에서는 주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인상 범위를 결정했다. 군은 의정활동비 결정 사항을 평창군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며, 3월 중 개최할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조상원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2일 (목)

종합 01면

도내 병원 “한주 못 버틴다”...의대생 동맹휴학까지

의대 증원 반발 집단행동 확산

강원대 의대 92% 휴학계 제출

연세대 원주의대도 공동성명

실습 연기·PA간호사 진료 우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 강원도 내 대학 의대생들은 21일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나섰다. 강원도내 병원들은 “이 상태로는 일주일을 유지하기 버겁다”는 반응이 쏟아진다.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조사 결과 이날 오전 11시 기준 강원도내 수련병원 9개 385명의 전공의 중 81.3% (313명)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원대 병원은 전공의 101명 중 79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 중 74명이 진료 업무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은 전공의 50명 중 인턴 11명, 전공의 38명 등 총 4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릉아산병원 소속 전공의 33명 중 23명도 사직서를 내고 이탈했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151명 중 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 의대생들까지 동맹휴학을 예고, 상황은 악화일로다. 강원대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비상시국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동맹휴학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2월 20일부로 강원대 의대 의학전

문대학원은 공식적으로 휴학계제출을 선언한다”고 했다.

21일 오전 11시 기준 강원대 의대 학생 234명 중 92.3% (216명)가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대 관계자는 “교수와의 면담 등 휴학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며 “제출인원 수 역시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연세대 원주의대 재학생들도 지난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정부당국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고려해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의료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21일 본지가 연세대 원주의대에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휴학계를 제출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은 붕괴 직전이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관계자는 “하루 이들은 교수들이 당직, 수술을 번갈아 맡아 버틸 수 있겠지만 이번 사태가 2월 안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공의 부재는 진료지원(PA)간호사의 불법 진료나 의대생 실습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원대병원의 경우에도 전공의가 해야 할 업무를 교수나 간호사 대신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PA간호사들은 현행법에 명시된 근거가 없어 의료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의료 공백을 필사적으로 메우고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업무 이후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연세대 원주의대의 경우에는 전공의 부재로 인해 본과 3·4학년 학생들의 실습이 연기됐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들의 당직, 수술 등의 업무를 교수님들이 나눠서 진행하시다보니 학생 실습까지 처리할 수가 없어 학생 실습이 연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정호·정민영

▶관련기사 4면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2일 (목)

종합 04면

전공의 떠난 병원, 응급환자 3시간 넘게 도전역 뱅뱅이

집단사적 2일차 의료공백 심화
전원 요구·치료 거부 등 잇따라
진료중단 우려 환자 몰려 '혼란'

전공의 집단 사적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일어난 지 이틀만에 환자가 수술할 곳을 찾지 못해 양양에서 원주까지 이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뇌경색 환자에게 전원을 요구하는 등 강원도내 병원들의 의료공백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 결과 이날 오전 11시 28분쯤 양양군 남문리에서 당뇨를 앓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무릎 아래로 심각한 과사가 발생해 119구급대가 출동해 A씨를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강릉아산병원에서는 현재 전공의의 부재로 인해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했고 결국 A씨를 태운 구급차는 속초의료원, 속초보광병원 등 영동에 있는 병원을 찾아다녔으나 결국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구급대원들은 도소방본부가 운영하는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도움을 요청,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강원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다른 병원을 선택



전공의 집단사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1일 도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구급차가 줄지어 서있다. 유희태

정해 보려 했으나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이들은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현 상황을 설명하고 A씨를 국군강릉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국군강릉병원에서는 환자의 다리 상태를 확인하더니 여기서 치료는 어렵다는 판정을 내렸다.

다시 구급차에 탄 A씨는 원주연세병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거기서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구급대의 설득 끝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3시쯤 A씨가 이송됐다. A씨가 도 전역을 돌아다닌 시간은 무려 3시간 30여분이었다.

같은 날 오전 강원대병원에서 만난 뇌경색 입원 환자의 보호자 이모(43)씨도 오전 진료 중 전공의가 없어 어머니를 재활센터로 전원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수술 이후 회복 중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공의

수가 부족해 입원실에서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다"며 "병원에선 재활센터로 옮겨주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큰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는 진료도 중단될 것을 우려한 환자들이 몰리면서 진료가 지연되거나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도 이어졌다.

이날 강원대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등 지역 내 대학병원에는 오전부터 환자들이 몰렸다. 이날 홍천에서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을 찾은 황모(54)씨는 "원래 다음 주 외래 진료였는데 전공의 파업 때문에 진료에도 차질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기사로 계속 나와 이번 주로 예약을 앞당겨 왔다"며 "아버님 때문에 병원에 다니고 있고 홍천에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자주 쓸 수도 없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왔다는 이모(34)씨도 "평소 보다 진료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다. 평소 같으면 15분 정도 대기하고 들어가는데 오늘은 예약을 하고 왔음에도 30분 정도 기다렸다"며 "주차장도 만차라 주차하느라 병원을 세 바퀴는 돈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호·박재혁

江原日報

2024년 02월 22일 (목)

종합 02면

도내 외국인 석·박사 영주권 취득 쉬워진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외국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강원특별법을 활용한 규제 완화로 우수 외국인 인재를 대거 강원도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강원자치도는 올 5월 제22대 국회 출범 직후 발의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3건의 외국인 유치 특례를 담았다.

가장 주목을 끄는 특례는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이공계학과 석·박사 취득자에 대한 영주·국적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해주는 방안이다.

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제공해 인구 감소를 막으면서 기업 유치도 노릴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이민자 증가에

도 특별법 3차 개정안에 외국인 이민 유치 특례 포함
국적 획득 기간 단축...우수 인재 영입 기업 유치 기대

대한 일부의 거부감도 줄일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내 체류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 절차, 체류 자격 변경, 기간 연장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강원자치도에 한정된 이민 비자를 신설, 도지사 추천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원자치도는 21일 법무부를 방문해 이 같은 외국인 정책 특례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다소 미온적인 반응으

로 전해진다.

도 관계자는 "이민청 신설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흐름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육부의 반대로 실패했던 국제학교 설립 권한의 강원자치도 이양도 3차 개정안에 재도전한다. 실제 동해안 일부 시·군에서는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제안 등이 구체적으로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22일 오후 3시에는 김명선 행정부

지사 주재로 외국인 정책 및 해외사례 공유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관계대사, 강원도립대, 국제통상과, 공공의료과, 친환경농업과, 어업진흥과, 기업지원과, 여성청소년과 등을 총망라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계절근로자 관리, 외국인 선원 복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다문화가족 지원 등 강원자치도의 다양한 외국인 정책과 해외 우수 이민 정책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2023년 말 기준 강원도 인구 155만1,291명 가운데 등록외국인 인구는 2만3,484명으로 1.5%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2022년) 대비 3,012명(14.7%) 증가했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4년 02월 22일 (목)

지역 14면

폐광지 응급환자 이송지원 효과 톡톡

태백시 2020년부터 운영 4년간 시민 658명 수혜

【태백】태백시가 열악한 폐광 지역 응급의료 환경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 보호와 지역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이 효과를 얻고 있다.

태백시보건소는 2020년부터 지역 의료기관에서 응급환

자를 타 지역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이용하는 응급차량에 대해 이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모두 658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첫해인 2020년 144명(3,509만원)에서 2021년 179명(4,625만원), 2022년 153

명(4,108만원), 2023년 162명(4,133만원) 등 연간 100명 이상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밖에 폐광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유일한 산부인과인 한마음산부인과의 24시간 분만 의료실 운영과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호 시장은 “응급환자 이송비를 지원한 결과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위급환자를 골든타임 내에 대형병원으로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몫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들이 의료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2일 (목)

지역 16면

주택 신축·개량 저금리 지원 인구유입 모색

기획취재 화천군 인구감소 극복 대책 ② 정주여건 개선 집중

1월말 인구 2만3000명선(2만2942명)이 무너지자 화천군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화천군 ‘민선 8기 중점과제’인 인구관련 정책은 주택건설·택지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과 이를 위한 재정지원 등 사업이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택구매·주거유지 재정지원
화천군은 주택 건설이 실제적인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택 구매와 주거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은 먼저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가 연면적 10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매입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동

청년층 임대주택 보증금 보조

초등 중일 돌봄 복합센터 운영

도내 첫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금융기관 융자에 따른 이자액을 최대 50%(융자금 추천한도 2억원 이내, 발생 이자 3% 이내)까지 지원한다. 또 앞으로 조례제정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역의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다세대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노후주택을 개

량하는 사업비용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을 통해 저금리 융자를 앞선할 예정이다. 사업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 농촌주택으로 신축은 최대 2억5000만원, 증축과 리모델링, 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원 한도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연 2%)와 변동금리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연계 교육·복지 정책 추진
화천군은 이들 주거정책과 연계해 교육지원과 복지·보육 정책도 역점 추진한다.

군은 지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무상 해외 어학연수와 배낭여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 전용 공공 도서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주도의 기숙형 학습관을 운영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앞선 정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군이 지난 10여년전부터 구상했던 지자체 주도 초등 중일 돌봄시설인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보육서비스 강화 기준보다 5년 이상 앞선 조치로 전국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인구감소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지자체는 우선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안정된 주거에 교육지원과 돌봄서비스까지 더해지면 우리군의 최우선 정책목표인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를 앞당겨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안익호 eunsol@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2일 (목)

지역 10면

원주 도내 첫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 가동

관련분야 공공기관 업무협약
시설 무상안전점검 등 투입
일자리 창출·재난 예방 주력

원주시가 전문 자격을 갖춘 신중년 세대로 구성된 생활안전 기동단을 가동,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 생활 안전을 한층 강화한다.

시는 21일 시청에서 원주소방서(서장 이강우), 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정하동),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광역본부(본부장 이일재), 한국전기안전공사 원주형성지사(지사장 오정화)와 'Safe(안전한) 원주,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원주시는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원주소방서, 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광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원주형성지사와 'Safe(안전한) 원주,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원강수 시장, 이강우 서장, 정하동 본부장, 이일재 본부장, 오정화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신중년(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재취업해 노후를 준비하는 5060세대) 일자리 사업인 생활안전 기동단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시가 도내 지자체 최초로 운영한다. 시는 전기·가스·건축·소방 분야 자격증 및 경력을 가진 50~64세 신중년을 시설 무상안전 점검에 투입한다. 취약계층 형광등·콘센트 교체, 가스 차단기 설치 등 소규모 무상수리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생활안전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날 협약 참여 기관들은 체계적·효율적 기동단 운영을 위해 협업한다. 우선 사업 주체인 시는 기동단 10명을 선발,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 소방서는 소방 안전점검 실무교육을, 국토안전관리원은 모바일 안전점검 플랫폼과 시설 안전점검 실무교육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가스·전기 안전점검 실무교육 및 점검 장비를 지원한다.

원강수 시장은 "안전관리 분야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사고와 사회 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전문 퇴직 인력을 활용한 신중년 일자리 창출,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민 khm29@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2일 (목)

지역 11면

“옥계 폐놀 유출지역 전면 재조사” 주민 촉구

포스코 공장서 민·관 대책회의
시의회·변영회 “대체산업 우선
상주직원 발령 면민 신뢰 잃어”
포스코 홀딩스 “이달 말 재협의”

속보=폐놀 유출사고가 발생해 정화 활동을 벌이던 포스코홀딩스가 옥계 마그네슘 제련공장을 철거(본지 2월 13일자 11면 등)하려 하자 지역 주민들이 폐놀 유출지역 전면 재조사와 대체산업 제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 환경정화 화민관공동대책협의회가 21일 강릉 옥계 포스코 공장에서 개최됐다.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 환경정화 민관공동대책협의회가 21일 강릉 옥계 포스코 공장에서 열렸다.

이날 포스코 홀딩스 측은 “지난 2017년 마그네슘 제련 사업 중단 이후 암모니아 터미널 사업 등 대체 산업들을 지속 발굴 및 검토 중”이며 “오는 9월까지 정화작업 마무리를 위해 정화 업체 변경 및 공법 변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포스코홀딩

스 측의 일방적 통보와 대체 산업에 대한 답변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분노했다.

김기영 시의장(위원)과 박문근 옥계면변영회장(위원)은 “이미 수년 전에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정화공법을 이제 와서 다시 업체를 변경해 진행하겠다는 것, 상주 직원들을 전부 발령낸 사안 등 종합적인 이유로 포스코 측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면민들은 포스코 폐놀 유출지역 전체 다시 시료를 채취해 재조사하길 바란다”며 “이달 말까지 대체 산업 제시 및 공법 및 업체 변경 이유, 소통 부재 등 관련 명확한 답변이 가능한 책임자와 만나지 못하면 폐놀 유출로 피해를 입은 지난 10년에 상응하는 부분을

요구하고 강력한 실행행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홀딩스 관계자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요구된 폐놀 유출지역 전체 재조사와 소통 위한 간부 상주 관련해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며 “대체 사업의 경우 지속 발굴 중이며, 이달 말까지 주민들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홀딩스는 마그네슘 생산을 위해 지난 2012년 옥계면 금진솔밭길 일대에 제련공장을 조성하고 마그네슘을 생산하다 2013년 6월 폐놀 유출로 10년째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 포스코홀딩스는 기존 정화작업 업체를 변경,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연재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2일 (목)

지역 13면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내달 공식 출범

47명 채용·위탁시설 인수인계
휴양림·체육시설 등 통합관리
일자리·경영안정 과제 부상

고원자연휴양림 등 태백시 공공시설물을 통합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출범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달말까지 직원 채용을 완료하고 오는 3월 중순(19~21일) 공식 출범한다. 최근 47

명을 뽑는 제1회 공개 및 경력경쟁 시험에 252명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오는 27일 최종 합격자가 결정돼 3월초 임용된다.

공단 직원은 일반직 경력 8명, 시설관리직 경력 7명, 일반직 9급 행정직 4명, 시설관리직 28명 등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12월 제1대 이사장에 남궁중 전 태백시 행정복지국장이, 상임이사에 김주영 태백시 현안대책위원장과 김재영·한철희·심영호씨 등 4명이 각각 임명됐다.

직원배치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위

탁시설에 대한 인수인계에 들어간다. 공단은 3월말까지 재산·재물조사, 시설 현황 등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시설관리공단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장성동 문화플랫폼 1층에 입주하고 고원자연휴양림과 통리오로파크, 국민체육센터, 불령장, 근로자종합복지관, 쇠바우골탄광문화장터, 공원묘원·화장장 등 지역 사업을 통합 관리한다.

그동안 공단 설립에 따른 운영 적자와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시의

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성공적 출범을 위한 안정적 경영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남궁중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활성화 방안 뿐만 아니라 문제점, 개선사항, 나아갈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통합 관리를 통한 공공시설물의 전문·체계적 관리와 시민 중심의 시설 운영으로 주민 복리증진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江原日報

2024년 02월 22일 (목)

지역 16면

상습침수 철원 동막리 집단이주 추진

장마철마다 수해 발생... 이주 필요성 지속적 제기
군, 용역 진행 후 주민 논의 통해 부지 선정 계획

【철원】여름철 집중호우로 수차례 침수 피해를 입은 갈말읍 동막리의 주민 집단이주가 추진된다.

동막리 마을은 1996년과 1999년, 2020년 등 장마철에 한탄강의 물이 불어나면서 역류, 한탄강 지류인 동막천이 범람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배수펌프장 등 동막천 범람에 대비한 수리시설 설치가 쉽지 않아 주민들은 장마철마다 임시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써 왔다.

그러나 임시방편으로 설치한 차수벽이 주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이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철원군은 이에 따라 주민들을 위해 동막리 마을의 재해위험개선지구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주 부지 선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동막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11가구의 주민 모두 이주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가구 중 8가구는 임대주택

입주를, 3가구는 주택 신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육선 군 민원허가실장은 “수차례 수해를 입은 동막리 마을 주민들의 집단 이주를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치수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는 한편 이주 현실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호기자 mantough@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2일 (목)

지역 14면

홍천주민 “태양광시설 편법설치 난무 대책을”

남면이장협의회 등 군수 면담
개발 허가신청 수백 건 ‘붓물’
주민 “지역실정 반영 조례 개정”
군수 “의견 수렴해 공청회 개최”

홍천 주민들이 전문성 없는 조례 제정에 따른 편법 쪼개기로 사실상 대형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민들의 생활 터전에 들어서고 있다며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홍천 남면이장협의회와 시동 1·4리, 신대2리 주민 등은 21일 군청을 방문해 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태양광발전시설 편법 쪼개기 설치반대의견을 명확하게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제대로 된 조례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21일 본지 취재결과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규정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네차례나 개정됐다. 2023년 7월 소규모



홍천 남면이장협의회와 시동 1·4리, 신대2리 주민 등은 21일 군청을 방문해 태양광발전시설 편법 쪼개기 설치 반대를 요구하며 신영재 군수와 면담을 가졌다.

태양광발전시설(부지면적 1200㎡ 이하)에 대한 개발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자 외지인들과 태양광업체들이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여러 개로 나눠 개발허가 신청을 하는 등 편법 쪼개기 신청이 난무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항의가 이어졌다. 홍천군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같은해 10월 군의회를 통해 조례를 다시 개정,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의 기준을 강화했으나 이역

시 한계가 있다며 21일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한 것이다. 남면 주민들은 이후 홍천군이장연합회와 함께 지역실정을 반영한 조례안을 작성해 군과 군의회에 요청하는 등 적극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류정렬 시동1리 이장이 편법 쪼개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에 반발하며 이장증을 반납했고, 같은해 10월 화천면 주읍치리의 주민 이경환 씨는 집 바로 앞에 태양

광발전시설이 들어서게 됐다며 불안과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2023년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허가 건이 약 240건인데, 7월 조례 개정 이후 개발허가 신청만 수백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7월 이후 대규모 부지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잇따라 6~7개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10월 이후 줄어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류정렬 이장은 “50m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로 주택에 인접해서 소규모 시설이 여러개 들어서면 사실상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곁에 두고 생활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주민들의 생활 터전에 우후죽순 설치해 환경을 훼손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영재 홍천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후 공청회를 열고, 조례 재개정 등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유승현

江原日報

2024년 02월 22일 (목)

지역 13면

도로 통제 버스 끊겨 ... 재난안전본부 가동

고성 최대 50cm 폭설

【고성】강원북부산간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고성지역에 최대 50cm의 많은 눈이 내리며 일부 도로가 폐쇄되고 농촌지역의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고성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유니목과 덤프 등 장비 60여대와 인

덤프 등 장비 60대·인력 투입 88개 노선 제설
군 “비닐하우스·구조물 붕괴 각별 주의” 당부

력 등을 투입해 지역 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88개 노선에 대한 제설작업을 펼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기상청과 고성군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 현재 간성읍 흘리 55cm, 토성면 도원리와 원

암리 55cm, 죽왕면 구성리 25cm 등을 기록했다. 특히 군은 22일까지 산간지역의 경우 많은 곳은 최대 60cm, 해안지역은 40~5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폭설로 델피노 입구-미시령 정상 6.6km 미시령옛길과 풍랑

으로 월파 위험이 높은 거진해안도로 2km 전 구간이 통제돼 각각 미시령관통도로와 화진포해안도로로 우회하고 있다.

구성리-탑동리 군도 11호선 2km 구간 및 농어촌도로 202호선인 대진-마달리고갯길 2.3km 구간도 일시 통제되고 있다.

간성읍 진부령 정상-흘리와 간성읍-탑동리, 토성면 성대2리-성대1리, 도원2리-도원1리 등 4개 노선의 마을버스도 운

행되지 않고 있다. 군은 해당구간의 경우 높은 경사로와 결빙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운행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인력 및 장비를 총동원해 제설작업에 주력하고 있다”며 “비닐하우스나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와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천열기자 history@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2일 (목)

종합 01면

영동 폭설

고성 향로봉 56.6cm·속초 49.3cm

강원도 전역에 대설 특보가 내려지면서 고성 향로봉에 50cm 이상의 눈이 쌓이는 등 특히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눈은 오는 23일까지 영동과 산지를 중심으로 이어지겠다.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오후 5시 기준 강원도내누적 적설량은 고성(향로봉) 56.6cm·속초(설악동) 49.3cm·강릉(성산) 37.3cm·강릉(삼당령) 36.5cm·인제(조침령) 35.9cm·양양(오색) 30.7cm 등이다. 강원 산지의 경우 22일까지 최대 50cm 이상, 영동은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고, 영서는 5~1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다. 일부 지역의 경우 눈이 지상 기온의 영향으로 비로 바뀌는 곳도 있겠다. 신재훈 ▶관련기사 5면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2일 (목)

사회 05면

무거운 습설에 도로·하늘길 막혀...제설장비·인력 총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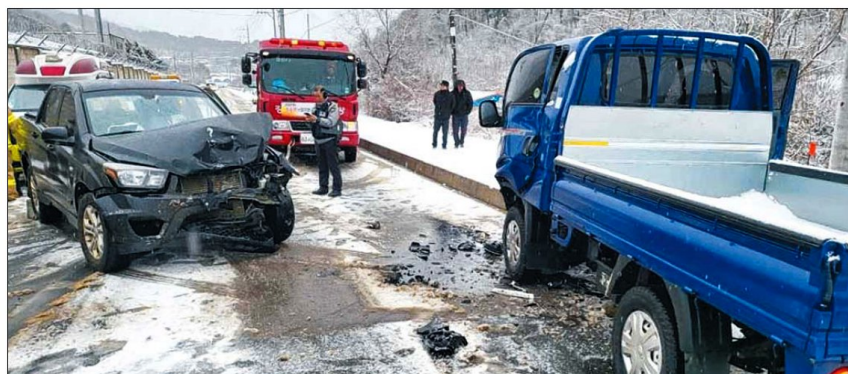
폭설과 씨름한 하루

고성 향로봉에는 56cm 이상의 눈이 내리는 등 21일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대설 특보가 내려지면서 각 지자체도 분주히 제설작업에 나섰다. 눈과 비로 미끄러운 길에서는 각종 사고도 속출했다.

■ 산지 50cm 이상 눈폭탄...지자체 제설 총력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오전 6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 제설장비 2204대와 인력 2579명, 제설제 6695t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펼치고 있다. 향로봉에 50cm가 넘는 눈이 쏟아진 고성군은 보유하고 있는 덩크 차량 등 자체 장비를 총 동원해 총 88개 노선 296km에 대한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삼척도 하장면 일대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시민까지 연신 시가지에 쌓인 눈을 치워야 했다. 이번에 내린 눈은 습기를 가득 머금은 '습설'로 많은 눈이 내린 삼척 하장면 일대에서는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주민들까지 삽으로 연신 무거운 눈을 긁어냈다. 트랙터까지 동원돼 흙여나비가 섞인 눈이 추운 날씨에 얼기전에 치우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강원도 전역에 눈이 내린 21일 오전 8시 38분쯤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한 초등학교 앞에서 SUV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며 1t 트럭과 충돌해 60대 남성 등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고성 1·인제 2개 노선 결행조치 원주-제주 잇는 항공편 2회 결항 눈길 미끄럼 사고 등 27건 접수

■ 교통·항공편 막히고, 길은 통제
기상악화로 일부 도로와 항공편도 차질이 생겼다. 고성의 마을버스 1개 노선과 인제 2개 노선은 결행 조치가 내려졌다. 또 16개 노선(삼척2·홍천1·

강릉8·고성5)의 경우 단축운행을 하고 있다. 원주에서 제주로 향하는 노선은 2회 결항했다. 또 강릉 안반데기길은 지난 20일 오후 8시부터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지에도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67곳은 출입이 통제됐다. 동해안 2479척의 어선도 안전조치됐다. 고성군은 미시령옛길(군도 8호선, 텔피노임구-미시령정갈)을 전면통제, 거진해안도로 전구간은 일

시 통제하고 있다.

버스 노선과 도로가 통제되면서 시민들의 발이 묶였지만 일부 영상의 날씨는 보인 곳은 금새 눈이 녹아 대조됐다. 특히 강릉 등 영동에서 일부 영상권의 기온을 보여 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인 반면 시내 도로에는 비와 눈이 섞여 내려 도로에 눈이 쌓이지 않은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강릉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강릉 시내에서도 산간지역은 30cm 넘는 눈이 쌓이고, 시내권에서는 비와

눈이 섞여 내려 도로가 깨끗한 현상을 보고 있다"며 "같은 지역 다른 느낌이어서 헛갈린다"고 말했다.

■ 눈·빗길에 교통사고 속출

눈과 비로 미끄러워진 도로 탓에 각종 사고도 속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지난 20일 오전 6시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한 소방활동은 총 28건으로 2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중 교통사고가 27건을 차지하는 등 사고가 이어졌다.

21일 오후 2시 46분쯤 동해시 천곡동 동해고속도로 속초방향에서 SUV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60대 여성 등 4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선 날 12시 24분쯤 동해시 나안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SUV가 충돌해 80대 남성 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같은날 오전 11시 21분쯤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서 SUV가 눈길에 미끄러져 전신주와 충돌,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오전 8시 38분쯤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에서 SUV가 눈길에 미끄러지면 서 맞은편 1t 트럭을 들이받아 60대 남성 등 4명이 다치는 등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다.

신재훈·지역총합

江原日報

2024년 02월 22일 (목)

사회 05면

‘56cm 눈폭탄’ 도로 마비·교통사고 수십건

지난 20일부터 대설특보가 이어진 강원지역에 최대 56cm 이상의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

21일 오후 2시46분께 동해시 전곡동 동해고속도로 강릉 방향 도로에서 스포티지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탑승자 4명이 부상을 입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에 앞서 오전 8시38분께 화천군 사내면 실패초교 앞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과 코란도 SUV가 충돌, 트럭 운전자 A(63)씨 등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 총 28건의 눈길 교통사고가 접수, 2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폭설과 기상 악화로 인해 일부 도로와 교통편이 마비되기도 했다. 21일 원주공항의 제주행 항공편 4편(출발 2편, 도착 2편)이 모두 결항됐다.

강릉 안반데기길 4.6km 구간, 고성 델피노입구-미시령 정상 6.6km 구간과 거진 해안도로 2km 구간 등이 통제됐다. 이 밖에도 버스 노선 3개가

미시령 구간·거진 해안도로 통제... 버스 결행·단축운행
원주공항 항공편 모두 결항...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금지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출근길 빙판 주의해야

결행됐고, 17개의 버스 노선이 단축 운행됐다. 국립공원 탐방로 67곳(설악산·태백산 각 21곳, 치악산 14곳, 오대산 11곳)도 출입이 금지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새벽 4시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 누적된 적설량은 향로봉 56.6cm, 속초 설악동 49.3cm, 강릉 성산 37.3cm, 삼당령 36.5

cm, 조침령 35.9cm, 양양 오색 30.7cm, 양양 영덕 29.4cm, 대관령 28.1cm, 강릉 왕산 26.3cm, 평창 용산 20.2cm, 삼척 도계 18.5cm, 동해 달방담 14.4cm 등이다.

강원자치도는 20일 오후 6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 장비 2,204대와 인력 2,579명을 배치해 제설 작업과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섰다.

기상청 관계자는 “동해안은 23일까지 눈 또는 비소식이 이어지겠다”며 “도로가 매우 미끄럽고,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저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 등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예보했다.

김준겸기자 lean@kwnews.co.kr

江原日報

2024년 02월 22일 (목)

종합 01면

오늘 산간에 눈 40cm 더 쏟아져... 영동 내일도 폭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

21일 강원특별자치도 내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며 향로봉 56.6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강원 내륙은 22일까지, 동해안은 23일까지 비 또는 눈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22일 최대 40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예보되며 피해가 우려된다. ▶관련기사 5·13면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오후 5시가

지 적설량은 향로봉 56.6cm, 속초 설악동 49.3cm, 강릉 성산 37.3cm, 삼당령 36.5cm, 고성 간성 10.52cm, 고성 현내 8.3cm, 평창 면운 6.3cm, 화천 상서 6.2cm 등이다. 북강릉에도 4.2cm의 눈이 쌓였고 춘천 남산은 1.1cm의 적설을 기록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결행되거나 단축 운행되는 등 불편이 잇따랐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2일에도 남쪽으로 들어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겠고 동풍이 유입되면서 비나 눈이 내리겠다”며 “내륙은 22일까지, 동해안은 23일까지 비 또는 눈이 계속되어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출퇴근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고 예보했다. 22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산지 20~40cm이고, 많은 곳은 50cm 이상 내리겠다. 중·북부동해안에는 10~30cm, 남부동해안은 5~20cm의 적설량이 예보됐다. 강원내륙은 5~10cm의 눈이 쌓이겠다. 박서회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2일 (목)

사설/칼럼 19면

선거구 확정 더 미뤄선 안 된다

-막판 결정 땀 흘린... 강원 8석 이상 확보 마땅

차기 총선을 5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지자와 지역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느 선거구에 속할지, 출마하는 정치인이 어떤 현안을 내세워 공약을 할지도 불분명합니다. 또한 유권자와 주민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가 정해진다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깊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정서적으로 상이한 지역을 합치는 '짜깁기식' 확정 은 갈등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확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전체회의는 선거구 확정 의 '데드라인'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 상황과 물리적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강원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선 21대 총선에서 적용된 현행 선거구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여야가 잠정 합의를 이뤘으나, 쟁점 지역구를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29일 본회의에서 확정안이 끝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엔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총선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획정위가 제출한 안대로 선거구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획정위 자체 안은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6개 시·군이 통합된 선거구가 핵심입니다. 강릉 선거구는 강릉·양양으로 바뀝니다. 이 경우 혼란은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원 선거구와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매번 확정 때마다 희생양으로 전락해 온 강원 지역에선, 정당에 유리하도록 변경하는 '게리맨더링식 선거구'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면적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 지역 대표성이 문제로 거론된 만큼, 8석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무엇보다 선거구 확정을 더 이상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출마 후보들이 지역의 현안을 꼼꼼히 챙겨, 더 치밀한 공약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입지자들의 공약과 인물을 살필 수 있는 선택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선거구 확정이지연되면, 급조한 공약이 나오기 십상입니다. 지지 후보를 정할 때도 이성보다는 감정에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예측 가능한 정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가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2일 (목)

사설/칼럼 19면

비수도권 열악한 공공의료 방치 안돼

-극단적 대처 멈추고, 의료서비스 향상에 지혜모아야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린 정부의 공공 의료정책에 대해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이 반발하며 집단행동이 격화되는 등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측은 의사 증원이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집단행동에 따른 법적 조치를 예고, 강도를 높이는 중입니다. 격화되는 대립을 멈추고 의료의 본연 목적인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의사는 정부에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역시 의사가 직업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의 관계 속에는 정부,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사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 기술과 지식이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의사는 오랜 시간 지식을 습득하고 숙련 과정을 거치며 경험을 쌓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닙니다. 증원 철회 관철을 위해 의료과업에 참여하고 심지어 환자로부터 진료 책임을 피하는 서약서를 쓰도록 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으로 비칩니다. 환

자에게 신뢰를 잃는다면 권위와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겪으면서 공공의료 중요성과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동시에 부족한 지역의 의료 인력을 길러내고,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격차가 심한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부족한 실상에 대해 절감했습니다.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려면 의료 공공성 확보가 절실한데, 도내 공공의료원과 보건소는 물론 대학병원조차 필요한 의사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고액 연봉을 제시해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서 진료과목이 폐기될 정도입니다.

단지 1000명당 의사 숫자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다거나 하위권에 있다거나 하는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의사인력은 수익을 더 창출하기 쉬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심화되는 중입니다. 고액의 임금으로 지역에 의사를 불러오는 방법은 건보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문제 해소도 어렵습니다. 극단 대치를 멈추고 '국민'을 중심에 놓고 붕괴되는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의료 불균형 현상 및 부족한 필수 의료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년 02월 22일 (목)

사설/칼럼 19면

道 소멸위험 전국 세 번째 수준, 위기 극복하자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소멸위험 수준이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정치시민넷이 통계청의 ‘2023년 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분석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자치도의 소멸위험지수는 전년 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0.40%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0.34%), 경북(0.36%)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지수가 낮을수록 지방소멸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특히 0.2~0.5%는 소멸위험진입 단계, 0.2% 미만은 소멸고위험 단계로 분류된다.

지방소멸 위기는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젠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까지 위협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겠다며 2006년부터 15년간 3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신생아 장려금, 보조금 지급 등의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했다.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와 같은 사고와 방법론을 적용하면 결과는 불을 보듯 분명하다.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더욱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소멸 지역 지자체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공공기관 이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절실하다. 또한 생활인구 늘리기와 귀농·귀촌 활성화 등 상생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역과 지역 간, 지역과 대학이 지역경제 순환 구조에 맞춘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꼽는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소멸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문제 해법을 ‘디지털 혁신’에서 찾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구축 및 지역별 디지털 산업 진흥 전략을 마련 중이다. 지방소멸 위기는 저출생과 고령화 탓도 크지만 심각한 청년층 유출이 더 큰 원인이다. 저출생이 아닌 청년 인구 유출에서 해답을 얻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정보기술(IT)·바이오·콘텐츠 등 유망 디지털 산업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 혁신이 지역에서 제대로 꽃피우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 구원투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역 대학·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은 한시가 급한 국가적 과제요, 지역의 최대 현안이다.

江原日報

2024년 02월 22일 (목)

사설/칼럼 19면

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숨통 터 줘야

정부는 완전 폐광을 앞둔 태백, 삼척에 숨통을 터 줘야 한다. 즉, 이들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 태백 장성광업소는 올 6월, 삼척 도계광업소는 2025년 6월 폐광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태백, 삼척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구직급여,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전직·창업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연간 최대 300억여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중 정부에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태백과 삼척 완전 폐광 시 9조원 이상의 피해와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가 지난해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태백의 피해 규모는 3조3,000억원, 삼척의 경우 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삼척 도계읍에 가장 많은 5조3,000억원의 피해가 집중되고 태백 장성동의 피해도 2조5,000억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태백 지역내총생산(GRDP)의 13.6%, 삼척은 9.6%가 증발하는 셈이다. 또 태백에서는 876명(장성동 722명), 삼척 1,685명(도계읍 1,603명)의 대량 실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지역의 쇠퇴는 지방자치단체 혼자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없다.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을 때 지역의 쇠락을 막을 수 있다. 폐광지역 문제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부가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가 말해 주고 있다. 중국은 전국에 약 15만 개의 광산이 있다. 면적만 수백만 ha에 이른다.

중국은 2004년 폐광지역 복원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이름은 ‘국가광산공원 프로젝트’다. 폐광지 개발 전략은 생태 복원, 상업 개조, 복합문화단지 조성이다. 핵심은 추진 주체다. 바로 국무원이다. 책임자는 당연

총리다. 폐광지역 개발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이 덕분에 중국내 탄광 복원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기획됐고, 자원 동원도 국가 주도로 집행될 수 있었다.

장성·도계광업소, 완전 폐광 앞두고 있어

9조원 이상 피해와 대량 실업 발생 예상

위기지역 지정 땀 연간 최대 300억 국비 지원

영국도 비슷하다. 1951년 폐광지역 개발법과 이를 위한 자본조달법이 제정됐고, 1969년에는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킨 ‘광산채굴법’을 만들어 개발 단계에서부터 채굴과 복원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런 노력 덕에 영국은 1990년대에 벌써 성과를 냈다. 폐광을 개간한 산림 용지가 속출했고, 광산토양개량 성적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총리가 이 개발을 진두지휘했다. 따라서 태백과 삼척의 탄광 완전 폐광 시의 대책은 정부가 맡아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지역의 사정을 더 잘 아는 자치단체가 고용 위기지역 지정 이후에 나타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